

大田廣域市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立및運營條例案

| | |
|----------|-----|
| 의안 번호 | 573 |
|----------|-----|

제출년월일 : 1995년 5월 일

제 출 자 : 대 전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기술력을 제고키 위하여
-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정보·자금·판로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활동의 중추적 시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 동 지원센터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인격 및 명칭을 규정함 (안 제2조)

- 법인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
- 명 칭 :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등의 제공
-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 기술·경영 연수사업
-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시장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라.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민법(제32조, 제45조, 제46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3조)
- 지방자치법(제95조)
- 지방재정법(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24조)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지원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관할구역외의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산) 지원센터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지원센터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
5.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기술·경영 연수사업
9. 통상산업부장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수익사업) 지원센터는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재산출연)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회계년도) 지원센터의 회계년도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지원센터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련 법 규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 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정관의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상산업부장관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①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조합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것

② 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파견의 사유·파견기간·파견절차·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